

韓·日, 과거사 협력 '물꼬'... '작은 진전' 속 남은 과거사 불씨는?

유골 수습은 안갯속, 갈등 현안 잔존
군함도·사도광산·독도 등 불씨는 여전
위안부 합의·강제징용 해법 후속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유골의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과거사 현안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일 관계를 흔들어난 역사·영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번 DNA 감정도 실제 유골 수습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합의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DNA 감정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적 성격이 강해 이견을 상대적으로 쉽게 좁힐 수 있는 조세이 탄광 부분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뤘으나, 다른 과거사 부분에서는 여전히 잠재적 갈등 요인이 적지 않다.

우선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둘러싼 전시·추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군함도는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설명·전시) 전략"을 조건으로 승인됐지만, 2020년 전시 공간이 유산 현상이 아닌 도교에 마련됐고, 전시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도 비슷한 사례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성실하게 기억하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에서 "가혹한 노동"을 언급하면서도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등 약속 이행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일본 측 주관 추도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2023년 강제징용 제3차 변제 합의 마련 이후 후속 과제도 '불씨'로 거론된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원 조달과 추가 피해자·기업 관련 절차 등이 남아 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시 정부 간 합의로 종중한다는 입장과 별개로, 재판 잔여금 처리 문제나 개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자산 현금화 등) 국면으로 넘어갈 경우 갈등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재점화할 수 있다. 한일 대륙봉 공동개발(JDZ) 협정 문제 역시 당장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변수다.

JDZ 협정은 동중국해의 한·일 인접 대륙봉 일부를 해양 경계로 확정하지 않은 채 양국이 석유·가스 등 자원을 공동으로 탐사·개발하자고 정한 합의다.

국내에선 공동개발구역이 이른바 '7광구' 이슈와 겹치며 자원·주권 논쟁의 상징처럼 언급돼 왔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며, 종료료 원하면 3년 전 서면 통고가 필요해 2028년을 전후해 연장·종료·재협상 문제가 다시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다음 달 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각료급 인사를 보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부관을 해당 행사에 파견해 왔다. 각료는 정부관보다 격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각

료가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11월에는 각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각료 파견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퍼져 있다. 하지만 만약 각료 파견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DNA 감정 역시 '첫걸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유골 DNA 감정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 단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일본 정부 측은 유골 수습 지원 요청에 대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등 소극적 자세"라며 "앞으로도 해저에 남은 유골 수습이나 유족 반환 등이 구체적으로 진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진전은 한국 측이 여론의 고조를 배경으로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다른 정부 관계자도 실무는 한국 측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전남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성)는 14일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협의회 제공

전남시장군수협, 시·도 행정통합

"국가 핵심축 도약 전환점"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지역 생존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규정하고 통합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과제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번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혁신적 결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광주의 인공지능(AI)·첨단산업 역량이 결합하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초광역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어서다.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행정통합의 주체는 도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간 실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현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성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장흥군수)은 "전남과 광주는 역사와 문화, 경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전남 22개 시장·군수는 한마음으로 행정통합에 협력해 전남·광주가 4차 산업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 대통령, 재일동포 만나 "불행한 역사 속 피해받은 이들에 사과와 위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간사이 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 동포분들이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야기를 전할 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많은 분이 또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도 있었다"고 했다.

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재외국민들을 간접으로 몰아

조작해 다수의 피해자가 만들어진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 우도도 마을 주민, 재일 한국 양심수 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그 와중에서도 재일동포 여러분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서 지역 방문 배경에 대해 "지난해 도교를 방문해 관동(간토) 지역 동포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 관서 지역을 방문하게 됐다"며 "사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서 지역을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 이곳이라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현에 대해 "고즈넉하고 우리의 공주나 부여, 경주 같

은 전통이 살아있는 느낌이라 낯설지 않고 포근하다"면서도 "안타깝게도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동포 사회의 헌신에 대한 감사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88년 올림픽과 IMF 외환위기 등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 취업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일 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더 안심하고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